
2024년 사회정책 방향

2024. 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요약] 2024년 사회정책 방향 i~vii

I . 추진 배경	1
II . 그간의 성과와 개선방향	2
III . 2024년 사회정책 핵심 추진전략	6
IV . 2024년 사회정책 핵심 추진과제	
① 인구절벽 완화 및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10
② 지역 성장동력 창출 및 균형발전	15
③ 디지털 적응력 강화 및 보편적 접근성 보장	20
④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증진과 환경 보전	25
⑤ 연대와 성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사회	30
V . 과제별 소관부처	35

[요약] 2024년 사회정책 방향

1 추진 배경

-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및 디지털 전환 등 사회난제 해결을 위한 역량 결집과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
 - ※ 저출산·고령화, 세계 패권경쟁, 첨단기술 중심 산업구조 재편, 감염병·기후위기 상시화 등으로 사회 제반이 대전환 분기점에 직면
- 부처간 벽허물기를 통해 분업 수준의 협력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 증거기반 사회정책 지원체계 긴요
- ⇒ 사회부총리 중심으로 부처가 협업하여 역점을 두고 해결할 문제에 대해, 추진전략과 주요과제를 담은 「2024 사회정책 방향」 수립 추진

2 그간의 성과와 개선방향

- (그간의 성과) ① 모든 사람의 성장과 역량개발 지원 ② 건강하고 튼튼한 사회관계망 조성 ③ 다종·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일상 보호에 주력

도약하는 미래	양육·돌봄	청년자립	첨단인재	해외인재
	■ 부모급여 도입 ■ 늘봄학교 시범운영	■ 주거공급 확대 ■ 자립수당 인상	■ 인재양성 전략회의 ■ 신기술 훈련 확대	■ Study Korea 300K ■ 취·창업 비자제도 개선
함께하는 연대	지역혁신	사각지대	취약계층	격차해소
	■ RISE, 글로벌대학 추진 ■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 발굴시스템 고도화 ■ 위기정보 입수 확대	■ 범부처 협업전략 수립 ■ 민관협력 발굴체계	■ 교육·문화향유기회 ■ 디지털·미디어교육
안전한 일상	필수의료	건강 증진	먹거리안전	약자 보호
	■ 필수의료인프라 확충 ■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 고위험군 정신건강지원 ■ 맞춤형 체육시설 확충	■ 수입식품 전자심사 ■ 마약범죄 예방·교정	■ 스톱킹처벌법 개정 ■ 폭력피해자 지원확대

- (개선방향)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사회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전략 추진
- 사회난제 해결과 더 좋은 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과제 중심으로 범부처 역량 결집

비전	사회난제 해결과 더 좋은 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범부처 사회정책 협력체계 구축		
추진 전략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교육·사회분야 데이터 개방·연계 확대	증거기반의 부처 융합형 사회정책 기획 활성화	데이터 기반의 사회정책 협업 생태계 구축
추진 과제	사회난제 해결	① 인구절벽 완화 및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출산율 회복: 의료·돌봄서비스 강화 / 가정친화적 사회규범 확립 / 청년층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 인구구조 변화 적응: 인재 경쟁력 제고 / 고령층 삶의 질 개선 / 해외인재 유치 ② 지역 성장동력 창출 및 균형발전 정주환경 개선: 지역 일자리 환경 개선 / 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 / 취약지역 지원 강화 지역 특색·고유 매력 발굴: 지역인재 양성·인구 정주를 위한 발전모델 창출 / 지역 특성 기반 매력 발굴 ③ 디지털 적응력 강화 및 보편적 접근권 보장 디지털 전환 촉진: 디지털 교육 혁신 / 사회서비스 편의성 제고 /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디지털 역기능 보완: 디지털 질서 정립 / 디지털 범죄 대응 / 디지털·미디어 격차 해소	
	더 좋은 사회로 도약	④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증진과 환경 보전 건강 증진·안전보장: 신체·정신 건강 증진 /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보장 / 재난 예측·대응 강화 환경 보전·탄소중립: 탄소중립 생활 실천 /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 / 생태환경 보전 ⑤ 연대와 성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사회 양극화 완화: 취약계층 지원 / 사회적 고립 방지 사회가치와 자아실현: 신뢰와 존중 확산 / 문화향유 기회 확대 / 평생학습 활성화	

3 2024년 사회정책 추진전략

- (데이터 개방·연계) 사회분야 데이터 개방·연계 활성화를 통해 사회난제에 대응하는 데이터 생성 및 분석 등 증거기반 정책 수립 지원
 -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데이터 개방·연계 확대 원칙, 사회정책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을 통해 사회분야 데이터 활용 수요 적극 발굴
 - * 사회난제 해결을 위한 정부·국책연구기관·민간연구소·학회 등 다양한 기관 간 연구협력 체계
- (범부처 협업 강화) 주요 사회난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범부처 협업 강화
 -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및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부처 간 긴밀히 연계하여 정책 설계 추진, 부처 공동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보완 강화
 - ※ '24년 사장회의부터 "제도개선 건의안건" 신설, 비공개 토의 안건 유형으로 포함

1 인구절벽 완화 및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담은 줄이고, 가정과 함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
 ⇒ 인구경쟁력 강화, 고령인구 삶의 질 확충 등 예정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

- ① **(의료·돌봄서비스)** 의료비 보조*를 통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유보통합(선도사업)·늘봄학교(전국 확대) 본격 추진 등으로 양육·돌봄 여건 개선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임신 사전건강관리·보조생식술 지원 등
- ② **(가정친화적 사회)**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 교육경쟁완화**, 위기·취약가족 가족 지원 등 가정친화적 사회규범 확립
 *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자녀연령(8→12세), 기간(최대 24→36개월), 급여(통상임금 100% 지원 주 5시간→주 10시간))
 ** 늘봄학교, 사교육비 경감, 교육발전특구 등 주요 교육과제의 현장 안착에 주력하면서, 양육부담·대입경쟁·수도권 집중 등 완화 추진
- ③ **(안정적 생활기반)** 청년층 취업 지원*, 공공분양 뉴:홈 9만호 공급 및 출산가구에 최저수준 금리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 청년 일경험 지원(+1,165억원), 구직단념 예방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281억원, 신규)
- ④ **(인재 경쟁력 제고)**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속,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학교 교육력 제고(자율형 공립고 2.0 추진)를 통한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 인재양성전략회의 반기별 개최 및 법제화 추진, 기업직업훈련카드 확대(+7천 개소) 등
- ⑤ **(고령층 삶의 질)** 고령층 계속고용장려금 확대(+3천명)·능력개발 지원 등을 통한 고령층 계속고용 활성화, 건강관리·치유서비스 등 확대*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178개소), 고령층 특화 산림치유서비스 확대(치유의 숲 49개소), 보훈요양원 증축(수원)·신규건립(충청권)
- ⑥ **(해외인재 유치)** 지자체-기업-대학이 협업하여 유학생 유치 전략 수립(24. 상반기), 이주배경 가족·산업현장 외국인력* 등 적응 지원
 * 외국인력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한국어능력 강화를 위해 산업현장에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사회통합교육 확대

2 지역 성장동력 창출 및 균형발전

- ⇒ 지역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수도권 간 격차 완화 및 인구 유입 촉진
- ⇒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산업특구 운영 및 특색 발굴

① (지역 일자리 환경 개선) 신산업 기업 유치·육성 환경 개선, 지역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추진, 농촌 산업·일자리 기반 확충*

*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농촌재구조화·재생 지원(95개 시·군 지원)

② (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40교) 및 유희시설 재활용*, 지역 문화기반**과 필수의료 지원체계 구축

* 도시숲 조성(국유지 3개소, 기후대응 19개소), 폐광지역(67억원)·폐산업시설(317억원) 문화시설화

**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61.5억원, 신규), 문화취약지역 문화예술교육(80억원, 신규)

③ (취약지역 지원 강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도입*, 농어촌·도서지역 사회 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거점기관 지정(30개소), 데이터 분석 지원**

*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투자하기 위한 펀드 조성

**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산정 범위를 89개 인구감소 지역 전체로 확대

④ (지역 발전모델 창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문화·산업특구 운영, 산업·일자리와 인재양성을 연계한 지역발전생태계 조성



⑤ (지역 매력 발굴) 지역 고유성 기반 로컬브랜딩 활성화(20곳, 130억원), 독창적 지역관광자원 발굴* 및 농촌 유입 활성화**

* 남부권광역관광개발(24년부터 10년간, 총 3조원)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23~27, 총 400억원)

**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사업(17개소, 누적),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확대(5천명, 957억원)

3 디지털 적응력 강화 및 보편적 접근성 보장

⇒ 교육·사회서비스 분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 윤리규범 확립

① (디지털 교육혁신) 학생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새싹 캠프 운영,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및 디지털 선도교사단(1,200명) 운영

* '24. 검정심사 → '25.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 도입 → '26~ 단계적 확대

② (사회서비스 편의성 제고)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Any-ID 확대* 및 혜택알리미** 구축, 전문영역 서비스 확대를 위한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383억원) 추진

* 본인이 원하는 인증방식으로 공공웹·앱에 로그인할 수 있는 시스템

** 개인별 상황변화를 인지하여 수혜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추천(26년까지 구축 목표)

*** 국민들이 법률, 의료, 심리상담 등 5대 전문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I 서비스 제공

③ (신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통합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보건·의료 R&D 인프라 마련,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 R&D 지원**

* 1단계 구축('24~'28. 총 6,066억원 투입)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 일반국민 등 총 77.2만명 모집

** 국가보건난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495억원, 신규)

④ (디지털 질서 정립) 범정부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 수립 추진*,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디지털 윤리체험관** 추가 개소

* 디지털 심화 쟁점·현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종합

** 언어폭력, 혐오표현 등 디지털 역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공간

⑤ (디지털 범죄 대응) 디지털성범죄물·마약정보 등 불법·유해정보 신속 차단*, 온라인 성착취 피해상담(5개 상담채널)·신고 지원 및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 해외 주요 SNS플랫폼의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모니터링 체계 운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마약류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여 심의 소요기간 단축

⑥ (디지털·미디어 격차 해소) 디지털·미디어 교육 강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기술** 적용, 지역사회 디지털화 촉진(스마트빌리지, 99개 과제)

* 디지털배움터(279억원), 디지털문제해결센터(과기정통부 18억원, 교육부 6.8억원) 운영, 범부처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 수립 추진

** 키오스크·모바일앱 등에 대한 디지털 취약계층 접근성 제고(공공기관 우선 적용)
청각·언어장애인의 통신중계서비스 지원 확대(소방청 119 다매체신고시스템과 연동)

4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증진과 환경 보전

⇒ 모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사고 등 위험예측과 대응·보장체계 고도화
⇒ 탄소중립 생활실천과 산업구조 녹색전환을 촉진하여 우리사회 자연자원 유지·보호

- ① (신체·정신 건강 증진) 청소년·학생 정신건강 증진*, 필수의료체계 개선** 및 필수약품 안정 공급, 스포츠클럽 접근성 강화로 체육활동 활성화

* 고위기 청소년 집중클리닉 전담인력(105명) 배치, 학생 정신건강 증진 관련 근거법 마련 추진

** ①응급의료 ②심뇌혈관 ③분만·소아 ④지역 공공 인프라 개선 및 역량 강화

- ② (일상생활 안전 보장) 안전한 근로*·실내환경** 조성, 지능형교통체계(ITS, 국도는 '24년까지 완료) 확대를 통한交通安全 강화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350억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26,500개소)

** 석면안전진단사업(400개소),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20개소)

- ③ (재난 예측·대응 강화) 각종 재난에 대한 예측·분석 강화*를 위한 재난관리 지능형 표준 시스템 구축 및 재난피해 대응역량 강화**

* 도시침수지도 제작·취약도로 자동차단 시설 확대(135억원), 산사태정보시스템 구축(33억원, 신규)·산림계곡 유량 관측망 구축(33억원, 신규)

** 재해위험지역 정비(8,766억원), 재난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 ④ (탄소중립 생활실천)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 구축, 환경교육도시(4개)·목재친화도시(10개, 누적) 조성,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지원 확대

* 일상 속 실천을 위해 편의성(통합 전용앱 구축) 및 혜택(소상공인 혜택 추가) 확대 등

- ⑤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 ESG 국내 기업 역량 강화 및 산업계 녹색전환을 위한 자금지원 강화*,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추진

* 직접지원 1,073억원 규모, 융자지원 1.5조원 규모

** 자원순환, 바이오에너지 분야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추진(경북 구미, 전남 해남, 충남 보령)

- ⑥ (생태환경 보전) 기후·생태정보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국토·해양 자연환경 보전*, 보호지역 관리**를 통한 우수 자연자원 확대

* 공공수역 녹조제거선(+16대), 도시생태축 연결·복원(147억원), 대규모 산림복원 확대(84억원)·산림복원지 유지관리(28억원, 신규), 해안방치 폐기물 공공수거(20억원, 신규)

** '30년까지 육상 및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지역이나 OECM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

5 연대와 성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사회

⇒ 국민 모두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발굴·지원체계 강화
 ⇒ 사회가치와 자아실현의 토대가 될, 풍요로운 문화 향유와 평생학습 활성화

①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기초생활수준 향상과 자활을 위한 지원 강화 및 新취약계층 대응 등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의회 운영(반기별 1회)

생계 지원	생활·양육	맞춤형 자활 지원
▶ 생계급여 지원수준 인상 +21.3만원(4인가구 기준) ▶ 장애인연금 기초·부가급여 인상 각 기초(+3.6%), 부가(+1만원)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총 148억원, +3만2천 가구 ▶ 석면피해 구제급여 확대 총 +179억원, (+1,018명)	▶ 주거급여 예산 확대 총 +1,702억원 (2.74조원) ▶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기초·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지원 +50만원(1~3구간), +30만원(4~6구간) ▶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총 +78억원 (2,324억원)	▶ 장애인 고용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25개소) 디지털 맞춤형 훈련센터 (4개소) ▶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4개 시도, 2,400명 ▶ 「경계선 지능인 지원방안」 수립 추진

② (사회적 고립 방지)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지원(10.89억원, 신규), 생애주기별 고독사 위험군 지원(전국 확대),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 고립·은둔을 택할 위험이 있는 정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인문프로그램을 통한 사회통합 추진(9개소, 19억원)

③ (신뢰와 존중 확산) 공정채용 인프라 확대*,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 증진 및 공감대 형성, 국가적 공헌에 대한 인정**, 시민교육·참여 활성화***

* 공공기관 채용규정 개선 공정채용 컨설팅 지원기업 확대(400개소), 통합형 임금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 IT 기술 기반 MZ세대 친화적 보훈콘텐츠 제작·활용,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운영, 제복근무자의 의료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등

*** 디지털·글로벌 환경변화를 반영한 학교 시민교육 추진, 은퇴 경력자 등의 사회기여 활동 활성화 추진

④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지급 규모 확대(11→13만원), 문화예술 창·제작 유통 지원(490억원) 및 청년 예술인 지원*

* OTT 글로벌 전문인재, 콘텐츠 번역인재, 문화기술융합인재 등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인재 집중 양성 추진(619억원)

⑤ (평생학습 활성화) 평생교육바우처(8만명, +2만명) 및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12개) 확대, 문해교육의 영역과 수요계층 지속 발굴·확대*

* 디지털 생활과학, 경제활동·직무 관련 능력 등 영역 확대 및 청년·이주배경 가족 등 대상 발굴

2024년 사회정책 방향

[본문]

I. 추진 배경

□ 우리 사회의 도약과 미래를 위해 선제적 대응 필요

-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및 디지털 전환 등 사회난제 해결을 위한 역량 결집과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
 - ※ 저출산·고령화, 세계 패권경쟁, 첨단기술 중심 산업구조 재편, 감염병·기후위기 상시화 등으로 사회 제반이 대전환 분기점에 직면
-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서 “더 좋은 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실천로드맵 제시 필요

□ 사회정책에 대한 사회부처 간 협업전략 필요

- 단일 부처 개별 대응으로는 복잡다기한 원인으로 초래되는 사회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처와 근원적인 해결에 한계
 - ※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협력 활성화 필요” (‘24.1.8, 주례회동)
- 분업(分業) 수준의 협력에서 벗어나 한 차원 더 높은 정책협업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 증거기반 사회정책 지원체계 필요

□ 다양한 상황과 요구에 맞는 지원을 위해 민관 소통 강화

- 주요 사회난제를 중심으로 해결 방향과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국민과 민간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행동하는 정부”로 변모

2024년 대통령 신년사」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

- 방안 수립 이후에도 가시적인 성과 창출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사회정책 성과·지표관리 체계화

✓ 사회부총리 중심으로 사회부처가 협업하여 역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사회정책 추진전략과 주요 과제를 담은 「2024년 사회정책 방향」 수립 추진

II. 그간의 성과와 개선방향

2023년 추진 성과

- **도약하는 미래** **모든 사람의 성장과 역량개발 지원**
 - **양육지원**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아동수당법」 개정('23.9.시행)으로 '24년 지원금액 인상 근거 마련
* ('23) 0세 70만원 / 1세 35만원('22년생부터 적용)
 - **교육·돌봄** '25년 유보통합 시행을 위한 환경 조성*, 늘봄학교 시범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414개소) 등 국가책임 교육·돌봄 인프라 조성
* 유보통합 추진방안 수립('23.1.), 정부조직법 개정('23.12.)으로 보육업무 관리체계 일원화 등
** 초1 대상 교육·돌봄 통합 운영, 아침·저녁·틈새돌봄 및 돌봄교실 운영시간(20시) 단계적 확대
 - **청년자립**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주거공급 확대(공공분양 7.6만호), 자립수당 인상(月40만원) 등 청년 고용·주거·자산형성 지원 강화
* ▲ 빌드업 프로젝트(저학년) 2.4만명 참여, ▲ 점프업 프로젝트(고학년) 1.8만명 참여
 - **첨단인재** 민·관·학 역량 결집을 위한 협의체* 출범 및 분야별 특화 정책수립, 신기술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 첨단분야 인력수요 증가 대응
* (구성) 대통령(의장), 사회부총리 등 정부위원, 교육·산업·연구계 전문가 등 총 30명 이내

• 신기술 직업능력개발 주요 성과 •

K-디지털 플랫폼 20 → 35개소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신규 5개소	K-디지털 트레이닝 3.2만명 양성 프로젝트 중심 심화과정 신설	첨단분야 일학습병행 아카데미 12개 → 19개	폴리텍 학과 신설 반도체학과 10개 AI+X 및 저탄소학과 5개
---	---	---	---

- **해외인재** 유학생 유치부터 취업·정주까지 고려한 범부처 방안* 수립, 취창업 관련 비자제도 개선** 등 해외인재 유입, 정착 기반 마련
* 정부초청장학생(GKS) 확대,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지역 정주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방안을 담은 'Study Korea 300K Project' 수립('23.8.)
**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신설, 기술창업 비자(D-8-4) 체류기간 확대(1→2년)



함께하는 연대

건강하고 튼튼한 사회 관계망 조성

- **지역혁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및 글로벌대학 선정*, 디지털 혁신거점(대구, 부산),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운영
 - * 경남 등 7개 RISE 시범 선정,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등 글로벌대학 10교 선정
 - ** 이차전지(대구·경북), 첨단모빌리티(경남·울산), 인공지능(광주·전남) 등 5개 분야 연구단 출범
- **지역활력** 지역 내 유희공간을 육아·보육, 주민참여 공간* 등으로 탈바꿈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복합시설** 설치 추진
 -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총 395개소), 철도어린이집(총 6개소) 등
 - **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 ('23.3.17.)
- **사각지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입수하는 위기 정보*를 확대하고, 지역 인적안전망 기반의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 *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고용단절·실업, 수도·가스요금체납 정보 등 5종 확대(총 44종)
 - ** 복지등기 운영 60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9만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8.7만명
- **취약계층** 범사회부처 협업을 통한 사회위기 취약계층 보호·지원 전략 수립('23.7.), 위기청소년, 노인 등 고용·자립지원 서비스 확충

• 취약계층 및 고용약자 지원정책 주요 성과 •

생계급여 수급 대상 확대 156.7만명 → 161.1만명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은둔형 청소년 추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	자립준비청년,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인상 月30만원 → 40만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확대 17.3만명 → 19.1만명 月1.2만원 → 1.3만원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78만명 → 97만명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 120개소 → 147개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7,888명 고령자 고용지원금 14,563개소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전국 80개 새일센터

- **격차해소** 지역 문화·교육을 위한 작은미술관 조성(13개소)·도서관 사서 지원, 온라인학교(4교) 신설, 전국민 대상 맞춤형 디지털미디어교육* 지원 확대
 - * 디지털배움터(1,011개소) 운영, 학교(1,068개교)와 도서관·복지관(245개소) 등에 미디어 교육 강사파견(1,130명)·교구재 지원



안전한 일상

다종 ·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일상 보호

- **생활안전** 재난 예방·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축·교통안전 강화 등 생활 안전망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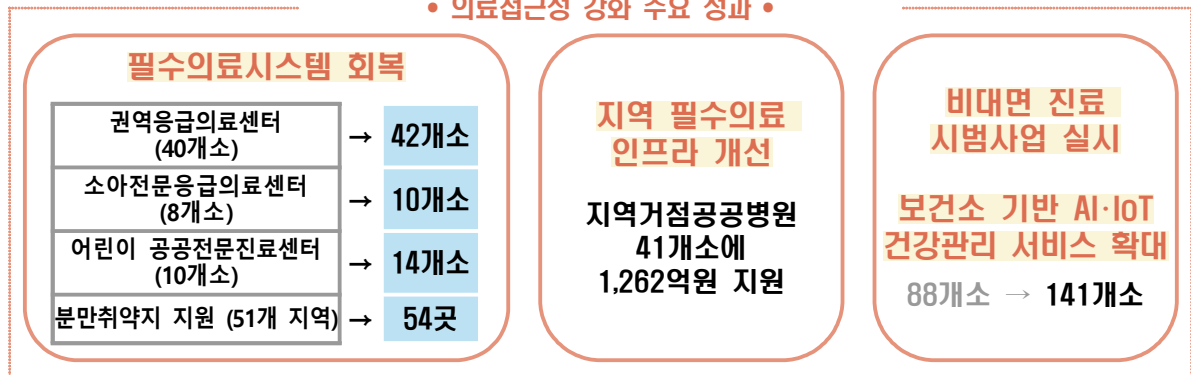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23.8.), 인파관리지원시스템('23.12.)

※ 140개 지자체로 건축안전센터 설치 대상 확대,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추진

- **필수의료** 응급, 분만·소아진료를 우선으로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체계 구축

※ 필수의료지원대책(1월)을 시작으로 소아의료(2,9월)·지역의료체계(10월) 대책 수립

• 의료접근성 강화 주요 성과 •



- **건강증진** 자살·자해 등 고위험군 대상 특화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등 지역 체육활동 활성화

*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240개),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1인 최대 100만원)

**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확산(150개교), 시니어 친화형 체육센터 건립(신규, 3개소),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체육센터 확대(누적 89개소)

- **먹거리안전** 수입식품 전자심사24* 도입('23.9.), 마약류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예방 교육부터 사법치료·사회재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 대상으로 자동 검사, 수입신고 시간 단축 (평균 1일→최대 5분)

** 신기술 활용한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중독재활센터 확대(2→3개소)

- **약자 보호** 스토킹·성폭력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체계 마련*, 아동학대·성범죄 등 약자 대상 폭력 보호·대응체계 구축

* 「스토킹처벌법」 개정('23.7.), 「스토킹방지법」 시행('23.7.)

※ 영·유아 대상 조사(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만3세 가정양육아동 등)를 통한 위기아동 발굴,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상담·신고 지원 등

정책적 한계와 개선방향

□ 사회정책을 운영하는 과학적 전략 필요

- 그간의 협업이 부처별 추진정책의 물리적 연계에 그쳐, 사회정책 추진 인프라 개선과 전략에 대한 공동목표 설정·실행에 한계
- ➔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산업구조 전환 등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사회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 필요
- ➔ 정부부처·유관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는 데이터 기반 사회 정책을 통해 객관적 원인 진단, 사회난제에 선제적 대응

□ 사회난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범부처 역량 총결집

- 저출산 등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성과 창출 및 국민 체감에는 한계가 있어 상황 반전을 위한 특단의 노력 절실
- ➔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핵심과제를 구성, 사회난제 해결을 위한 부처 공동 대응으로 성과 창출 노력 확대
- ➔ 세계 최고 수준 돌봄, 교육여건 개선, 지방인재 양성 등 교육혁신을 기반으로 사회정책 연계·협업을 통해 사회난제 해결 모색

□ 미래 대비 및 연대 강화를 위한 사회기반 구축

-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목표와 지향점 설정 필요
- ➔ 자연 자원을 유지·보존하고 신체·정신적 건강을 도모하여 미래 세대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달성하고,
- ➔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가치·자아실현을 목표로 개인과 사회의 연대와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 노력 강화

Ⅲ. 2024년 사회정책 핵심 추진전략

비전

사회난제 해결과 더 좋은 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범부처 사회정책 협력체계 구축

추진
전략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교육-사회분야 데이터
개방·연계 확대

증거기반의
부처 융합형 사회정책
기획 활성화

데이터 기반의
사회정책
협업 생태계 구축

5대
핵심
과제

사회난제
해결

1 인구절벽 완화 및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출산을 회복 의료·돌봄서비스 강화 / 가정친화적 사회규범 확립 / 청년층 생활기반 마련
인구구조 변화 적응 인재 경쟁력 제고 / 고령층 삶의 질 개선 / 해외인재 유치

2 지역 성장동력 창출 및 균형 발전

정주환경 개선 지역 일자리 환경 개선 / 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 / 취약지역 지원 강화
지역 특색·고유 매력 발굴 지역 발전모델 창출 / 지역 특성 기반 매력 발굴

3 디지털 적응력 강화 및 보편적 접근성 보장

디지털 전환 촉진 디지털 교육 혁신 / 사회서비스 편의성 제고 / 기술 활용 사회문제 해결
디지털 역기능 보완 디지털 질서 정립 / 디지털 범죄 대응 / 디지털·미디어 격차 해소

4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증진과 환경 보전

건강 증진·안전보장 신체·정신 건강 증진 / 일상생활 안전 보장 / 재난 예측·대응 강화
환경 보전·탄소중립 탄소중립 생활 실천 /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 / 생태환경 보전

5 연대와 성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사회

양극화 완화 취약계층 지원 / 사회적 고립 방지
사회가치와 자아실현 신뢰와 존중 확산 / 문화향유 기회 확대 / 평생학습 활성화

더
좋은
사회로
도약

✓ **핵심 과제 중심으로 데이터 개방 및 연계가 필요한 분야 우선 발굴 및 건의**

-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데이터 개방·연계 논의 활성화 및 활용 확대 추진
- 민간·학계 등 사회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수요 발굴 병행

✓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범부처 협업 강화**

-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부처간 긴밀히 연계하여 정책설계 추진
-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모니터링 및 정책보완

□ **사회부총리 중심의 교육-사회분야 데이터 개방·연계 확대**

○ **데이터 개방** 교육 등 사회부처별 데이터·행정자료 개방 활성화

- 데이터 기반 학술·정책연구 지원, 민간 협력 신규 서비스 창출 등을 위해 국민 관심·수요가 높은 교육데이터부터 적극 개방

※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를 운영('23.12 출범)하여 교육데이터 개방·활용 확대방안 등 논의

-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한 데이터 개방·공유 관련사항 집중 심의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에 부합하는 데이터 칸막이 해소

※ 사회관계장관회의 內 데이터 개방·공유전략 안건 논의 활성화(반기별 1회 이상)

○ **데이터 연계** 교육-사회분야 간 행정데이터 연계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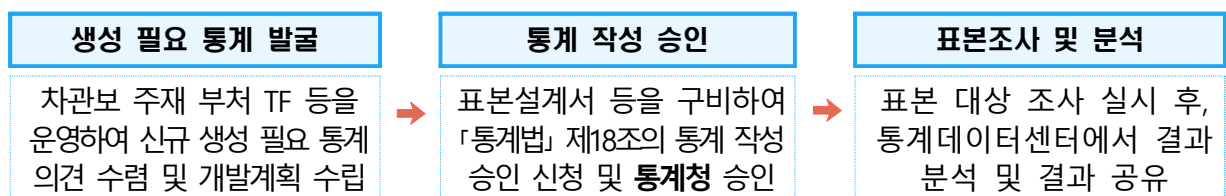
- 교육-사회분야 데이터 연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주요 사회 난제에 대응하기 위한 융합적 정책 수립 기반 강화

※ 교육행정데이터의 통합적 수집·분석·관리·활용 지원을 위해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24.하반기)하고, 유·초·중등부터 고등·평생분야까지 연계 범위 지속 확장

-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신규 데이터 수요를 발굴하고, 유관 부처 간 연계 형태·범위 설정 및 공동 개발 등 협력 추진

※ 사회분야 데이터 연계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통계청 간 업무협약 체결 ('23.12.1)

※ 가칭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교육부, 여가부, 통계청 등) 등 신규 통계 개발 추진('24.)



□ 증거기반의 부처 융합형 사회정책 기획 활성화

- **과학적 이슈 발굴·분석** 사회이슈의 선제적 발굴 및 입체적 분석 추진
 - 각종 사회지표^{정형}, 언론보도^{비정형}, 연구성과^{비정형} 등을 활용한 사회 현안 발굴 및 정책효과성·파급성 예측* 등 증거기반 정책 지원
 - * 핵심 정책(2개 내외) 대상 정책 효과성 및 파급성 예측 연구 시범 실시 ('24.)
- **핵심과제 집중** 5개 핵심 사회정책 과제에 범부처 역량 결집
 - 핵심 사회정책 과제와 연계된 과제를 사회관계장관회의 최우선 의제로 발굴하고, 데이터 연계·분석 등 전방위 지원
 - 핵심 사회정책 과제의 정책목표는 상호 간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므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창의적 해법을 발굴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 강화

구상안 · 핵심 사회정책 과제와 주요 안건화 영역 예시	
① 인구구조 변화 대응	▶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 ▶ 보유 인적자원 역량 제고 방안 등
② 지역 소멸 대응 및 균형 발전	▶ 지역 교육·산업·문화·의료 인프라 조성 ▶ 청·장년 이주 및 외국인 인력 유치 활성화 지원 등
③ 교육사회 분야 디지털 전환 대응	▶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초·중·고등-평생) ▶ 세대 간, 지역 간 디지털 격차 해소 등
④ 사회적 고립 및 다양한 가구 형태 지원	▶ 고립·은둔자 발굴·지원 및 사회적 인식개선 ▶ 다양한 가족형태 차별 해소, 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등
⑤ 사회 양극화 해소 및 취약 계층 지원	▶ 취약계층 생활 실태조사 도입 등 분석 기반 강화 ▶ 신청기반 복지서비스 개선 등

- **사각지대 해소** 부처별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방안 공동 마련
 - 취약계층 지원 협의체(교육부 차관 주재), 융합안전 기획 TF(교육부 차관보 주재) 등 의제발굴·정책발표까지 긴밀한 실무연계 체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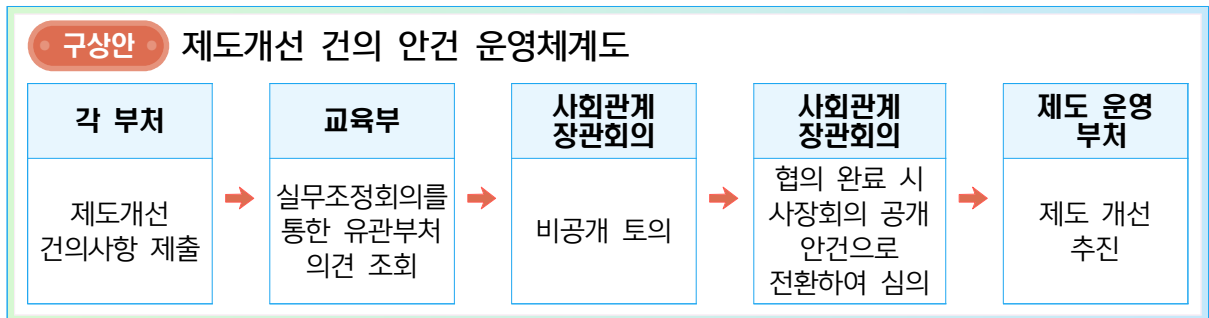
참고 · 취약계층 지원 범부처 협의체 역할	
사회위기대응 TF (~'23.10) ▶ 취약계층 선제 발굴·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 ▶ 범부처 취약계층 지원방안 수립	취약계층 지원 범사회부처 협의회 ('23.10~) ▶ 新취약계층 발굴·대응방안 논의 및 취약계층 지원방안 추진상황 모니터링 ▶ 취약계층 관련 데이터 수요-공급 매칭 등

□ 데이터 기반의 사회정책 협업 생태계 구축

○ 규제개선 법·제도 개선사항 등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규제개선 기능 강화

- 부처 간 데이터 공유·연계 활성화, 효과적 정책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건의하는 안전 유형*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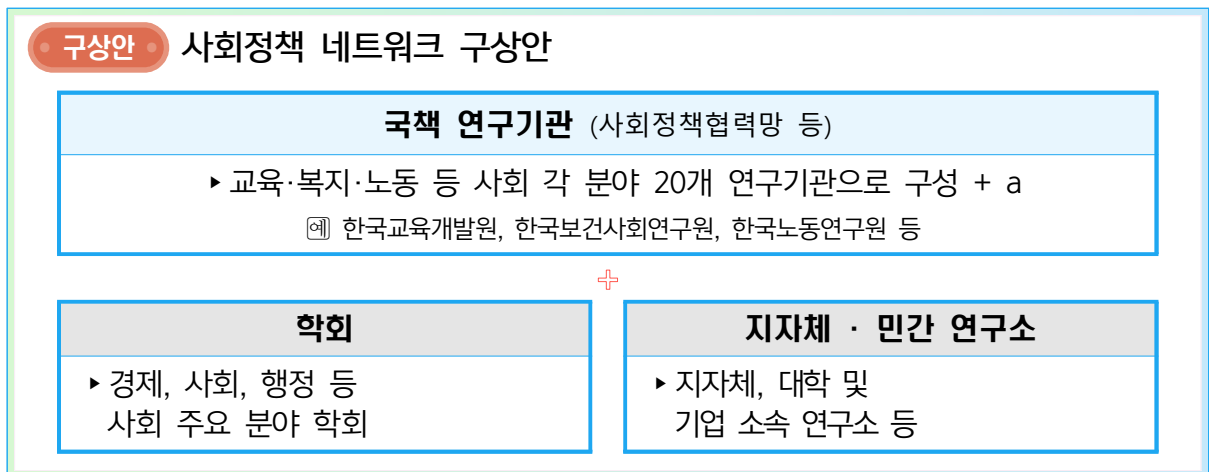
* (가칭) '제도개선 건의 안전', '24년부터 사회관계장관회의의 내 비공개토의 안전 유형에 포함



○ 연구기관 협력 사회정책 지원 연구기관 협력체계 운영 및 협동연구 활성화

- 다양한 분야 연구기관을 연계하는 사회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연구기관 간 사회정책 공동연구·분석, 안전개발 지원 등 실시

※ 필요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주요 연구기관 관계자 초청 및 제안 청취 등 추진



○ 학계, 민간 협력 공공 연구기관 외 민간·학계와의 정책소통 활성화

- 주요 학회 등 다양한 연구자에 대한 데이터·행정자료 공개를 통해 사회현안 연구·분석→정책기획→환류의 선순환 구조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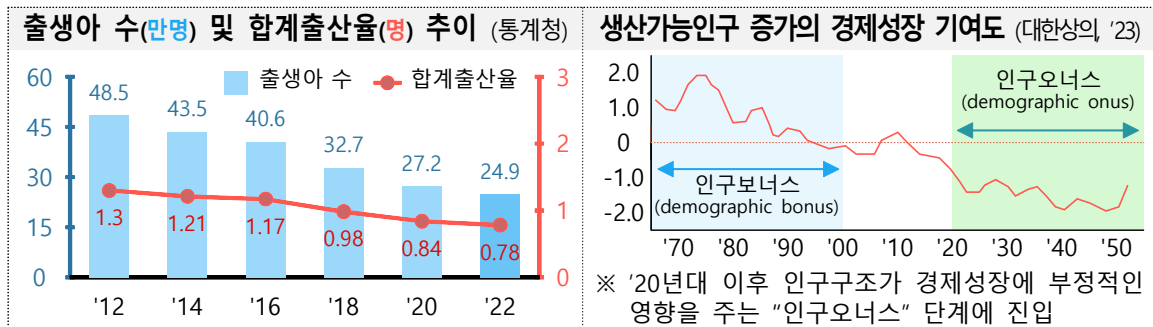
※ 분야별 학회,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를 통한 사회정책 데이터 융합 수요 발굴

IV. 2024년 사회정책 핵심 추진과제

1. 인구절벽 완화 및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 정책환경 분석 •

- 매년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와 사회구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 고령인구('00. 7% → '23. 19%) 및 이주배경 인구('17. 3.5% → '20. 4.2%) 비중 증가 등은 이미 진행중이므로, 예정된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전략 필요

※ Age Well SG(싱가포르) : ①AAC(Active Ageing Centre) 확대(154개→220개(~'25)) ②간병인 교육 보조금(CTG) 증액(\$200→\$400('24)) ③Friendly street(보행자 친화거리) 모든 마을로 확대(~'30) 등

• 현장의 목소리 •

"초저출산은 청년들이 체감하는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과 관련" - 한국은행, '23. -

"여성과 남성이 일과 양육을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필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3.4. -

"정책 대상을 '결혼 및 출산 선택 의사가 있는 청년'으로 구체적으로 설정해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에 집중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 '23.4. -

• 추진 방향 •

- **회복** 최저 수준 출산율에서 회복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가정과 함께하는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안정적 생활 기반 조성
- **적응** 사람 한명 한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령인구의 삶의 질 확충, 이주배경 인재 적극 활용으로 불가피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

- **임신·출산** 임신 사전건강관리, 난임·고위험 임신부 지원 확대 등 의료비 보조를 통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 참고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명	'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필수가임력 검진비 여성 10만원, 남자 5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보조생식술 지원	▪ 냉동난자 사용 임신·출산 희망 부부 대상 100만원 지원(최대 2회)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 소득기준 폐지(기준 중위소득 180% → 소득기준 없음)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 상담센터 확대 설치·운영('24. 9개소, +2개소 확대)

- **영유아 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금 확대, 소아 의료체계 강화* 및 0세부터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 구축 위한 유보통합 추진**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확대, 24시간 소아상담센터 신설, 소아전문의 양성 등

** 유보통합 선도사업('24.3~), 중앙·지방단위 관리체계 통합 추진('24.상반기~)

● 참고 ●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 확대

사업명	'23년		'24년
부모급여	▪ 0세 70만원 / 1세 35만원	→	▪ 0세 100만원 / 1세 50만원
첫만남 이용권	▪ 출생아당 200만원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 보육료 단가 221~653천원		▪ 전년 대비 5% 인상 232~686천원

- **유연한 돌봄서비스** 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 본격 도입('24. 전국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속 확충

* 지원가구 확대('24. 11만 가구, +2.5만 확대), 다자녀가구, 청소년부모·한부모 지원 확대

** 조성 확대 ('24. 435개소, +40개소 확대), 방과 후 일시돌봄, 야간·주말·방학기간 운영

● 참고 ● 늘봄학교 전국 도입

◆ 누구나 이용 ◆	◆ 초 1 맞춤형 프로그램 무상 제공 ◆	◆ 교사와 분리된 운영체계 ◆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24) 초1 → (‘25) 초1~2 → (‘26)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	재미있고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제공 (‘24) 초1 → (‘25) 초1~2	전담인력 지원 및 늘봄학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 설치·운영 추진

- **일·육아 병행** 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육아기 근로자로 인한 업무공백 부담 경감**

*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자녀연령 (8→12세), 기간(최대 24→36개월), 급여(통상임금 100% 지원 주 5시간→주 10시간))

** 업무분담 동료직원에게 대한 지원금 월 20만원 지원(신규), **인재채움뱅크** 확대(3→5개소)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다문화·청소년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취약·위기가족 맞춤형 지원 강화

참고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재구조화

'23년		'24년	사업내용
▪ 가족희망드림지원 ▪ 가족상담전문인력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 원가족회복지원사업 ▪ 면접교섭서비스	→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온가족보듬사업) (220개소)	▪ 취약가족 전문상담·사례관리 및 생활 서비스 연계(학습·정서·심리 지원) ▪ 1인가구 긴급돌봄·사회적 관계망 지원 ▪ 노부모 부양가족 및 손자녀 돌봄 조부모 상담·교육 지원 ▪ 재난피해 위기가족 긴급지원 ▪ 원가정 회복지원 및 면접교섭 등

- **다자녀 가구 우대**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지속 완화하고,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 다둥이 산후조리 도우미 인원·기간 확대(복지부),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2자녀까지 확대(국토부)

- **교육 경쟁 완화** 과도한 교육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등이 자녀 양육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교육개혁 지속 추진

참고 교육개혁 과제(예시)

구분	교육개혁 과제
육아	▪ 유보통합(선도모델, '24.3~), 늘봄학교를 통한 교육·보육 인프라 확충
대입	▪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24. 상반기) ▪ 양질의 학습강좌 개발, 대입 공공 컨설팅 등 공교육 중심의 대입준비 체계 안착
지역	▪ 교육발전특구, 글로컬30, RISE를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 모델 개발 및 수도권 집중 완화

- **청년 취업**과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단념자 등)을 **발굴**하여 지원 강화

참고 청년 취·창업·전직 지원

일 경험 기회 확대	청년 구직의욕 강화	구직단념 발굴·예방 ^{신규}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24. +303억원, +38개교 확대 ▶ 청년 일경험 지원 '24. +1,165억원, +2.8만명 확대 ▶ 해외취업 연수과정(K-Move스쿨) '24. +123억원, +1천명 확대	▶ 청년도전지원사업 '24. 9천명 (+1천명 확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애로청년 일자리 연계 '24. 12.5만명 (+3.5만명 확대)	▶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자체 주도 미취업청년 등의 구직단념 예방 및 신규 입직 청년의 직장 적응 지원 '24. 281억원 신규, 광역시·지자체 10여개

- **주거 지원**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등 공공분양 뉴:홈 9만호 추진, 출산가구 대상 최저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 구입 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우대

- **인재양성 5대 핵심분야***를 기준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속, 인재 양성전략회의 개최(반기별) 및 법제화 추진('24. 하반기)

*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 **맞춤형 직업훈련** 산업변화에 발맞춘 재직자·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특화 직무훈련*과 맞춤형 경력설계 지원**

* 직업훈련 비용·행정절차 부담을 완화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 확대 '24. 2만 개소(+7천개소), 신산업 중심 취약계층 직무역량 개발 지원

**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무능력·스킬향상·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직업훈련 및 상담 서비스 제공(고부가가치 훈련과정 확대, 74 → 79개)

- **학교 교육력 제고** 교사 수업 역량 제고 및 교육활동 보호로 교실혁명 실현하고, 공교육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자율형공립고 2.0* 등 추진

* (예시) 지자체·대학·기업 등과의 협력(협약)을 통해 특색있는 교육모델 운영

적응 5 고령층 삶의 질 개선

- **계속고용**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고용인프라를 구축하고, 재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를 통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참고 고령층 계속고용 활성화

고령층 고용지원 확대	재취업 및 능력개발 지원	통계지표 구축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4. 350억원, +82억원 확대 1.1만명, +3천명 확대	▶ 중장년 내일센터 확충 '24. +3개소 ▶ 고용24를 통해 취업지원·훈련 상담·고용지원금 원스톱 처리	▶ 경제활동인구 조사 표본규모 확대, 70세 이상 고용통계 세분화 및 제공지표 확대

- **건강한 생활 지원**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및 산림치유서비스 확대, 보훈요양원 확충 등 고령층 건강 증진

*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주치의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활용)하면서 치매와 전반적인 건강문제를 통합하여 지속 치료·관리받는 체계 구축

참고 고령층 건강 지원 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산림치유서비스	보훈요양원 확충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행태 개선 위한 기술 기반 서비스 제공 '24. 178개소(+37개소) → '27. 모든 보건소(261개소)로 단계적 확대	전국 치유의 숲과 지역 치매안심센터 소통·연계 추진 치유의 숲 : '24. 49개소 → '27. 76개소	고령 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요양원 (기존 8개 운영 중) 증축(수원), 신규 건립(충청권) 추진

적응 6 해외인재 유치

- **해외인재 유치** 지자체-기업-대학이 협업하여 유학생 유치 전략을 수립 ('24.상반기)하고, 이공인재가 많은 국가의 장학생 선발 확대

※ GKS 선발인원(예산) : '23. 1,334명(933억원) → '24. 2,400명(1,147억원)

- **국내 적응지원** 이주배경 가족*의 경제참여 활성화와 학습권을 보장하고, 산업현장 근로 외국인력 대상 사회통합교육**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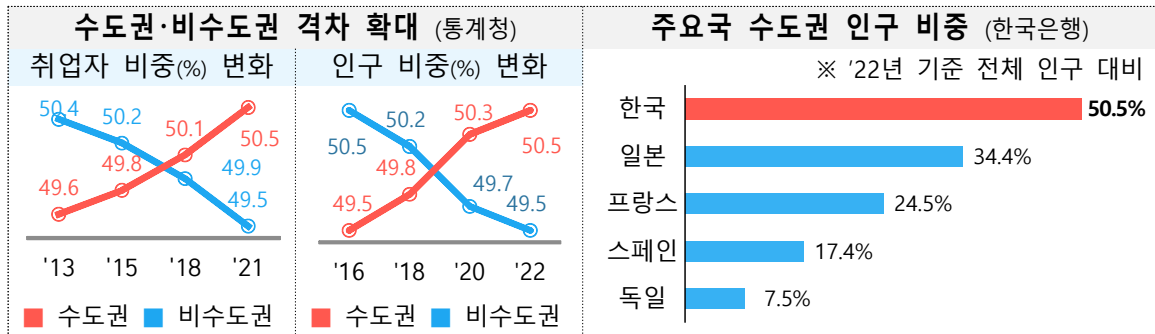
* ①가족센터-새일센터를 연계한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 신규 추진, ②다문화 아동·청소년 대상 한국어학급 등 확대, ③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신규 지원

** 외국인력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한국어능력 강화를 위해 산업현장에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사회통합교육 확대

2. 지역 성장동력 창출 및 균형발전

• 정책환경 분석 •

- 인구·일자리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 심각



- 전국적 인구 감소 추세에도, 지역별로 인구증감·구성 등 특성이 달라 지역 실정을 고려한 차별적 정책대응 필요

※ 지방인구의 수도권 순유출 추세에도 '12년 이후 충북·세종·제주는 순유입 지속 (통계청)
 (伊 아브루초) '00~'15년 15-34세 인구가 6만 명 감소 → 자연과학 분야 우수성과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GSSI, 사회·자연과학 박사과정 교육·연구기관) 설립으로 국내외 학생 및 교수 유입 (KLI, '18)

• 현장의 목소리 •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생태계와 지역인재가 선호하는 정주환경 구축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A 교수, '23.8. -

“지방 청년의 지역유출과 수도권 전입은 단순히 일자리 부족이 아닌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므로 지역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 원인 확인 및 해결방안 모색 필요”
 -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기자간담회, '23.8. -

• 추진 방향 •

- **개선** 재정투자를 통한 필수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수도권 간 격차 완화 및 인구 이동 촉진
- **특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산업 특구 운영 및 특색 발굴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 매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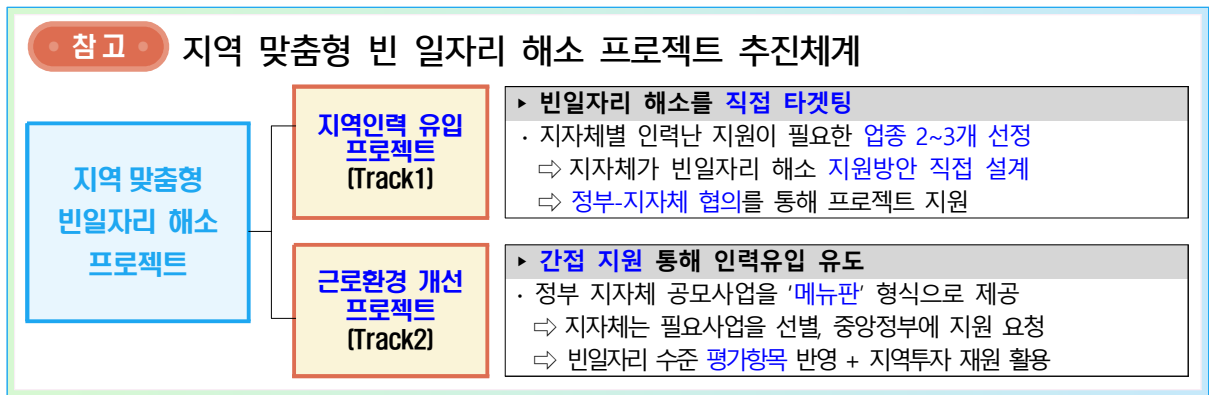
- **신산업 기업 유치·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 분야 기업 투자유치 환경개선* 및 공동연구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 지역 산단 내 첨단업종 유치 지원 확대, 노후산단 개선 등 지역 산단제도 혁신

** 국가전략기술·지역특화산업에 대한 대학 보유 기초자원(기술, 연구인력, 장비 등) 활용 강화를 통해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 **지역 노동수급 개선** 일자리 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 제공, “지역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추진

*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청년 일자리 알선, 기업체 구인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역할 강화



- **농촌 재구조화·재생 지원**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지자체간 협약**을 체결하여 농촌형 산업·일자리·생활서비스 기반 확충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4.3.) : 정부는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상향식으로 농촌공간계획 수립

** 정부-지자체간 농촌협약 체결 : ‘23. 75 → ‘24. 95개 시·군 지원

- **유희시설 활용**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주민 편의시설 조성, 저활용 공유재산, 폐산업시설 등을 도시숲**, 문화시설*** 등으로 탈바꿈

* ‘24. 40교 내외 공모사업 선정 → ‘27. 전국 기초지자체 1개소 이상 목표

** ‘24. 저활용 공유재산 국유지도시숲 3개소, 생활권 유희지 기후대응도시숲 19개소 추진

*** ‘24. 폐광지역(67억원), 폐산업시설(317억원)

- **문화활력 제고** 지역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원, 문화환경 취약지역 등을 집중 지원하는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등 추진

*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서울→세종), 국립충주박물관(신규)·진주박물관(이전) 건립 등 추진

참고 지역 문화활력 제고 주요 사업		
◆ 구석구석문화배달 사업 ◆	◆ 문화취약지역 문화예술교육 ◆	◆ 실버마이크·청춘마이크 ◆
‘문화가 있는 날’에 문화환경 취약지역·혁신도시 문화지구 대상 다양한 문화 향유 지원 (‘24. 61.5억원, 신규)	문화취약지역 등에서 마을 자원을 활용한 주민 수요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24. 80억원, 신규)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 청년·어르신 문화예술인의 거리공연으로 문화향유 확대 (‘24. 92억원)

- **의료 인프라 확충** 전국 어디든 골든타임 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필수 의료 지원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추진

*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협력기관(공공진료센터, 1·2차 의료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 실시, 권역별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확대(‘24. 8개)

개선 ③ 취약지역 지원 강화

- **지역소멸대응** 지역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매년 1조원 규모) 차등 배분* 및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신규 도입

* ‘23. A등급 120억원 B등급 96억 C등급 80억원 D등급 72억원 E등급 64억원(최대 56억원 차이) → ‘24. S등급 144억원, A등급 112억원, B등급 80억원, C등급 64억원(최대 80억원 차이)

**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모펀드 약 3천억원(정부재정+산업은행 출자+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 시 사업규모 약 3조원 추산

- **사회서비스 격차완화** 농어촌, 도서 지역 등 취약지역의 주민이 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거점기관 지정* 및 방문 서비스** 제공

* ‘23. 18개 기관 → ‘24. 30개 기관

** 거점 제공기관이 취약지역을 방문해 돌봄·심리지원·건강증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출장비, 인센티브 등 지원

- **데이터 분석 지원**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산정*의 범위를 89개 인구감소 지역 전체로 확대

* ①주민등록인구, ②체류인구(월 1회, 1일 3시간 이상), ③등록외국인 등을 토대로 산정



- **교육·일자리**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및 산업거점*을 조성하여 인재양성·정주환경 개선

* 지역별 특화된 “첨단산업 특화거점”, 규제 특례 및 체계적 해외 사업화를 지원하는 “글로벌혁신특구”,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집적된 “디지털혁신지구” 조성

-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지역 살리기를 조화롭게 추진하고, 지역 특성과 연계한 초·중·고 대학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생태계 조성

RISE/글로벌대학	◆ 교육발전특구 ◆	◆ 기회발전특구 ◆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자체, 시·도교육청, 대학, 기업 등 지역 주도로 교육혁신 전략을 수립·제안하고, 이에 따른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 등 추진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기업 이전, 창업 등을 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형 기업 지원 추진
좋은 학교 만들기 공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혁신	※ 지역별 교육혁신 전략 마련 시 규제개선· 지원방안 구체화에 대한 컨설팅 제공(24.2~12)	* 투자재원 마련(양도세), 투자이행취득세 재산세, 경영활동(법인세)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 부여
국가책임 교육·돌봄 늘봄학교, 유보통합		

- **지역 인프라**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지정을 통해 살기좋은 지역 인프라 조성 및 지방 인구 유입 유도

* 문화·주거·상업시설 제공, 건축규제 완화, 주택공급 및 학교설립 특례 등으로 ①지방 대도시의 도심 내 일터·주거·여가 거점 복합 개발 ②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권역별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지역 문화 콘텐츠 확산, 문화공간 조성 및 인력양성 등

- **연구개발**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대기업-지역기업-지역 연구자 간 긴밀한 연구협력체계 구축 및 글로벌 진출 기업 집중 육성* 등 추진

* 특구 내 기업의 규제 특례 활성화, 글로벌 기술 실증(PoC : Proof of Concept) 지원 확대 등

특화 5 지역 특성 기반 매력 발굴

-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고향올래*(GO鄉ALL來)”, 지역 특성을 활용한 “고향잇다**(GO鄉it多)”사업 등 추진
 - * 두 지역 살아보기, 위케이션, 로컬유학 등 5개 사업
 - ** 로컬디자인, 전통시장 유인시설 확충, 골목경제 활성화 등 5개 사업
- **살기좋은 생활권 조성** 지역 고유성 기반의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 지역 주민의 필수생활 완결성을 위한 소비·교육·여가 기반 등 조성
 - * Local+Branding('24. 20곳, 130억원): 지역을 '살 만하고 올 만하게' 만드는 전략
- **관광자원 발굴** 남부권광역관광개발*, 정원조성** 등 독창적 지역자원 발굴·육성, 지역 방문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 도입
 - * '24년부터 10년간 영·호남(5개 시·도)을 연계한 관광전략사업('24. 278억원, 총 3조원 규모) : 남동권(해양문화·휴양), 남중권(한국형 웰니스), 남서권(남도문화예술)
 - **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23~'27, 총 400억원)
 - *** 지역별 명예주민증을 통해 숙박, 식음체험 등 혜택 제공('24. 30억원,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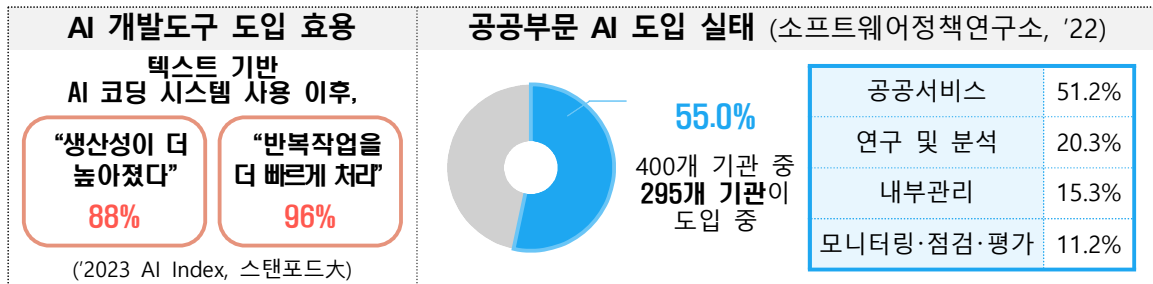
참고 지역 관광자원 발굴 주요 사업		
◆ 산촌관광 활성화 ◆	◆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	◆ 농촌크리에이티브 ◆
'국가숲길' (9개), '동서트레일',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등 산림자원을 활용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운영, 명소 조성 및 관광 여건 개선 지원 ('24. 47.5억원, +10억원)	민간여행사의 창의성과 농촌 체험마을의 특화자원을 연계한 테마 관광상품 개발 ('24. 29억원, 신규)

- **농촌 유입 활성화** 청년층의 주거·보육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단지* 조성·지원, 농업분야 진입·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 * 보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19. 시범, 4개소 → '23. 9개소 → '24. 17개소(누적)
 - ** 청년농 창업 초기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 확대: '23. 4천명, 551억원 → '24. 5천명, 957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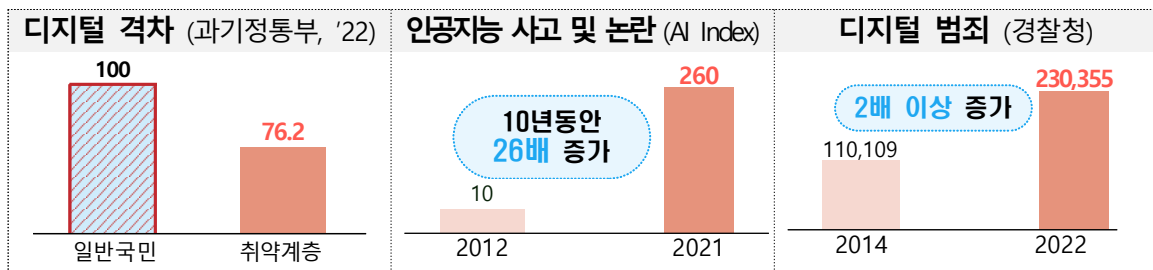
3. 디지털 적응력 강화 및 보편적 접근성 보장

• 정책환경 분석 •

- 초거대 AI 부상, AI챗봇 일상화 등 각종 사회 서비스에 디지털 신기술 적용이 확대되면서 공공부문 도입,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 증대



- 한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적용에 따라 계층 간 디지털 격차와 미디어 영향력과 결합된 신종범죄가 발생하는 등 디지털 역기능 심화



• 현장의 목소리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통해 개별 학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이 가능해지면 개인 맞춤형 교육 실현 가능” - IITP, '23.5. -

“인간이 지구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던 이유는 인간이 인간다움(humanity)이 있었기 때문, 새로운 인성역량(humanity+smart), HUMART가 필요” - 중앙일보, '23.5. -

• 추진 방향 •

- **촉진** 교육·사회서비스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연구개발 투자 강화
- **보완**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 권익과 디지털 포용성을 고려한 윤리규범 확립

촉진 1 디지털 교육 혁신

- **교실혁명** 학교 현장에 AI 디지털교과서 등을 도입하고, 학생 참여 중심 수업 혁신으로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실현

참고 디지털 기반 교실 혁신 지원사업		
◆ High-Tech, High-Touch ◆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	◆ 에듀테크 소프트랩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운영 ('24. 1,000교 내외, 700억원) 선도교사단(T.O.U.C.H) 확대 ('23. 395명 → '24. 1,200명)	학생 학습 진단·분석결과를 제공하고 개별화된 학습 지원이 가능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24. 검정심사 → '25.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 도입 → '26~'28 단계적 확대)	공교육 연계 에듀테크 성장을 지원하고 에듀테크 제품을 실증할 수 있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확대 ('23. 3개소, 18억원 → '24. 9개소, 97억원)

- **디지털 인재양성** 학생의 기술 친화력·활용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정보교과 시수 확대* 및 디지털 새싹** 운영, AI·SW 소양을 갖춘 인재육성*** 추진

* 2022 개정 교육과정 본격 도입, 초등 17 → 34시간, 중등 34 → 68시간 이상

** 디지털 새(New)싹(Software-AI Camp) :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인공지능을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 AI 선도학교 운영('24. 500개교), SW 중심대학 운영('24. 58개교)

- **디지털 평생·직업교육** 언제 어디서나 배우는 디지털 기반 자기주도적 평생교육* 실현,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중심 훈련** 강화

* 온라인으로 우수 대학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K-MOOC 강의 확대('24. 약 2,500개), 평생교육 콘텐츠·학습진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국민 평생배움터” 구축

** K-디지털 트레이닝을 첨단산업 분야 및 융합 분야까지 확대하고 양성인원 지속 확대('23. 3.6만명 → '24. 4.4만명)

촉진 2 사회서비스 편의성 제고

- **공공서비스 접근성 강화** 애니아이디(Any-ID)* 확대, 행정서비스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접근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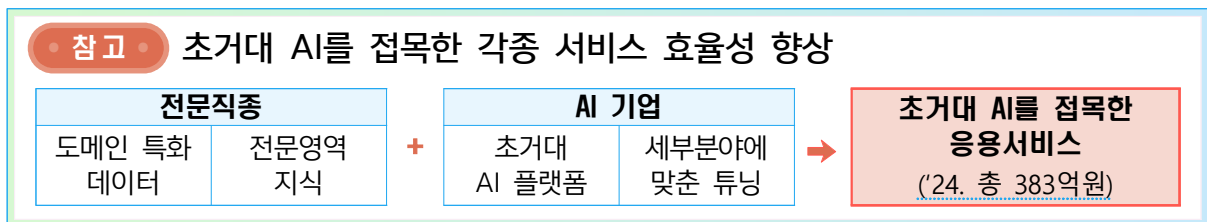
* 본인이 원하는 인증 방식으로 공공웹·앱에 로그인할 수 있는 시스템

** 사이트 한 곳만 접속해도 정부서비스를 한번에 신청·조회·처리할 수 있는 통합창구 구축(~'26)

- **찾아가는 서비스** 개인별 상황변화(출산, 이사 등)을 인지하여 수혜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추천해주는 “혜택 알리미” 구현

※ '26년까지 구축 목표, '23. 7억원 → '24. 34억원(+27억원 확대)

- **초거대 AI 접목** 법률, 의료, 심리상담, 콘텐츠, 학술 등 전문지식과 초거대AI의 생성 능력을 결합하여 서비스 효율성 향상



촉진 ③ 신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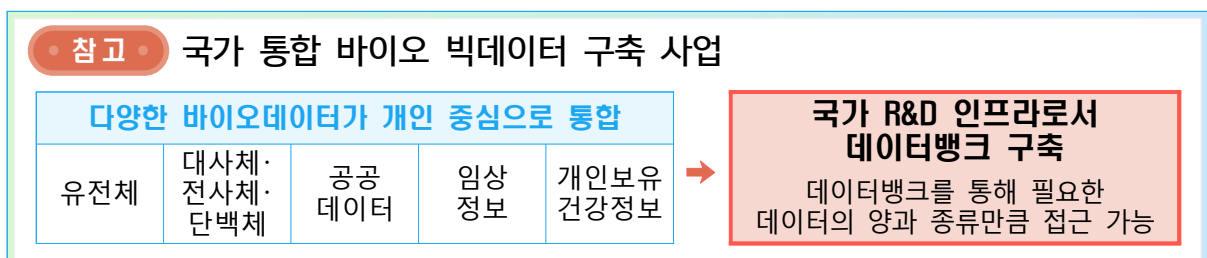
- **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국민 수요가 높고 해결이 시급한 사회문제를 규명*하고, 문제해결의 단초가 될 기술개발에 투자**

* ①고령화 ②사이버범죄 ③생활폐기물 ④미세먼지 ⑤미세플라스틱

** 디지털융합기반 사회문제해결 R&D 발굴(‘24. 131억원), 재난재해대응기술개발(‘24. 39.6억원)

- **바이오 데이터뱅크**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임상정보, 유전체 데이터 등)를 구축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할 보건·의료 R&D 인프라 마련

※ 1단계 구축(‘24~’28) 총 6,066억원 투입 /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 일반국민 등 참여자 총 77.2만명 모집 예정



- **도전적 연구개발** 사회난제를 해결하고 미래산업의 판도를 바꿀만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지원

※ 국가보건난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24. 495억원, 신규)

High Risk-High Return의 혁신적 성과를 도모하는 한계도전 R&D(‘24~’28, 총 490억원, 신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24. 노화역전, 생태모방 탄소자원화 등 총 282억원)

- **디지털 질서 정립** 디지털 심화 쟁점·현안*(52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종합하여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 수립 추진
*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23.11~12) 실시 → 52개 쟁점 도출

참고 디지털 권리장전*(23.9.25.) 주요 내용

*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담은 헌장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은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사회

① 자유와 권리 보장 ②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③ 안전과 신뢰의 확보 ④ 디지털 혁신의 촉진
⑤ 인류 후생의 증진

- 국민적 관심 및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디지털 분야 **핵심쟁점***(8개)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사회적 공론화**** 및 제도개선 추진

* AI 기술의 안전성 확보, 비대면 진료, 연결되지 않을 권리, AI 개발·활용 저작권 등

** 심층연구, 콜로키움, 오픈포럼, 디지털 공론장을 통한 국민 논의 등 종합 지원

-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맞춤형 교육* 실시 및 “**디지털윤리체험관**”** 운영 및 신규 개소(24.상반기)
* 정보편향, 신뢰성, 허위조작정보 등 인공지능 윤리를 포함한 내용으로 주제 확대, 직장인, 가족 등 교육효과가 높은 대상 중심으로 교육 수혜 확대
** 사이버폭력, 혐오표현 등 디지털 역기능 정보제공 및 디지털공간의 AI 윤리의식 제고 교육 등을 체험하는 공간(서울, 경기, 전북, 부산, 광주 기운영, [국립대구과학관](#) 內 [꿈나무과학관에](#) 신규 입점)

- **불법·유해정보 차단**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모니터링 체계* 운영 및 마약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으로 범죄 확산 조기 방지
* 해외 주요 누리소통망(SNS) 플랫폼의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모니터링 체계 운영
**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를 위한 방심위 인력 증원, 전용 신고페이지 신설 등 마약류 신속 심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심의 소요기간 단축
- **사이버 보안** 정보침해 위협·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예 화이트해커 양성(24. 190명) 및 첨단 수사 시스템 구축*
* 가상자산, 다크웹, 디도스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첨단 수사시스템 도입(24. 8.31억원)

- **상담·교육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상담·신고 지원***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한 예방 강화

* 온라인 성착취 피해접수 앱 출시 및 전용 상담채널(카카오톡 등 5개) 운영('24. 2.6억원)

** 온라인 그루밍 등 성착취 예방 및 대응방법 관련 교육콘텐츠 제작('24. 2억원)

보완 6 디지털·미디어 격차 해소

-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배움터*”, “디지털 문제해결센터**”**에서 디지털역량 향상 지원, **“미디어교육원”** 등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화***

* 주민센터 등 집 주변 생활공간에서 교육 제공·콘텐츠 개발('24. 279억원)

** 사회복지종사자, 보호종료아동 등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지원('24. 18억원, 과기부) 교육소외지역,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디지털 체험교육 제공('24. 6.8억원, 교육부)

*** 범부처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 수립 추진, 학교미디어 교육 강사파견 지원 확대('24. 1,290개교, +300개교), 팩트체크 교실 운영 확대('24. 150개교, +30개교)

- **포용적 기술 적용 키오스크·모바일앱** 등에 대한 디지털 취약계층 접근성 제고*, 청각·언어장애인의 **통신중계서비스** 지원 확대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준비기간 및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24~)

참고 손말이음센터(통신중계서비스) 주요 내용

청각·언어 장애인

←
문자 통화
영상(수어) 통화
→

107 손말이음센터
 일반전화, 홈페이지, 문자 등

←
음성통화
→

모든 국민

▪ 청각·언어장애인의 신속한 긴급신고를 위해, 소방청 119 다매체신고시스템과 연동하여 3자 영상통화 긴급신고 시스템 구축 추진('24~)

- **지역사회 스마트화** 지역주민이 다양한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ICT기반 혁신서비스를 도입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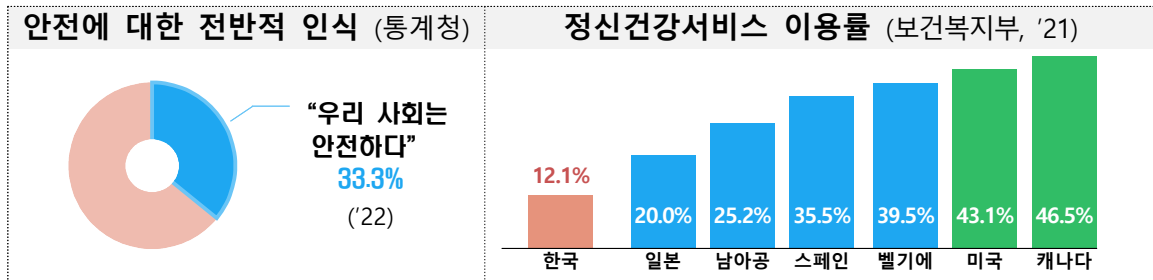
참고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사업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생활 편의시설에 디지털 기술 접목, 농수축산업 생산성 향상 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 서비스 도입 지원 ('24. 1,039억원, 전국 78개 지자체 99개 과제 선정)
- **주요 영역:** ①지역사회 소득증대 ②생활편의 개선 ③생활 속 안전 강화 ④주민생활시설 스마트화
- **적용 사례:** AI, 드론 등을 활용한 농·수산 자원관리, 국민생활 개선, 스마트경로당 구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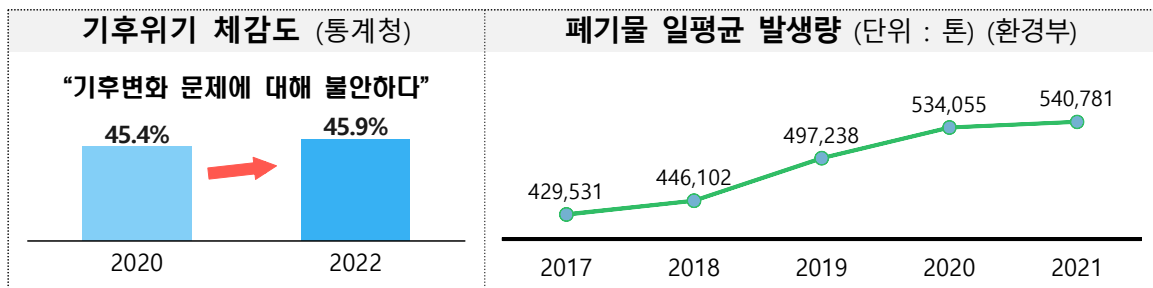
4.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증진과 환경 보전

• 정책환경 분석 •

- 전세계적인 감염병 사태와 자연·사회재난을 겪으며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이 표면화되어, 신체·정신적 안녕을 위한 사회서비스 필요성 증대



- 기후위기와 폐기물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 가중, 산업과 사회의 탄소중립·녹색전환이 시급



• 현장의 목소리 •

“청년들이 경험하는 기후불안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할 필요” - 서강대 미디어융합연구소 '23.11. -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양상과 사회적·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 취약계층 보호 및 적응 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 국가인권위원회, '23.1. -

• 추진 방향 •

- **안전** 모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사고 등 위험 예측과 대응·보장체계 고도화 추진
- **환경** 탄소중립 생활 실천과 산업구조 녹색 전환을 촉진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여 우리사회의 자연 자원 유지·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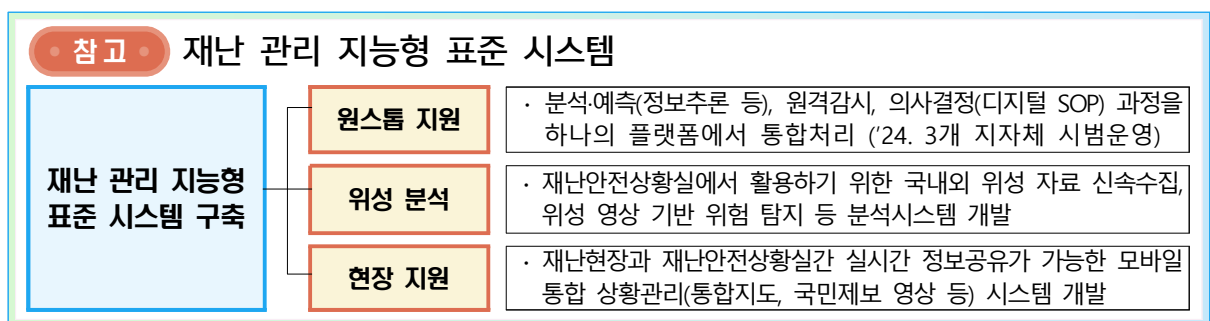
- **정신 건강**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확대, 고위기 청소년 특화 맞춤형 지원* 강화 및 학생의 사회정서 성장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105명) 배치 및 임상심리사 등을 활용한 종합심리평가 프로그램 상시 운영(6개월→12개월)
 - **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정서성장 지원을 위한 근거법률 제정 추진('24.상반기~)
- **필수·공공의료** 중양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등 필수의료체계*를 개선하고 필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내자급화 지원
 - * ①응급의료 ②심뇌혈관 ③분만·소아 ④지역 공공 인프라 개선 및 역량 강화
- **체육활동 활성화** 스포츠클럽 통합정보시스템 신규 운영, 지역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스포츠클럽의 인지도·접근성 제고
- **영양 지원** 복지시설 급식의 영양·안전확보를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확대 및 개인별 건강정보를 활용한 심층 영양관리 시범운영
 - * 센터 개소(누적): '22. 20개소 → '23. 68개소 → '24. 114개소 → '26~ 전국

- **일터안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및 국소배기장치 설치 활성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 등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 * 지원사업 확대 250 → 350억원 ** 컨설팅 지원규모 확대 '24. 26,500개소
- **실내환경** 환경 유해요소 저감을 위한 진단·시설 개선* 지원 및 환경보건서비스 전자시스템** 구축으로 수요 기반 서비스 제공
 - * 석면안전진단사업 지원대상 확대(350→400개소),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주택 31천동, 비주택 5천동) 및 지붕개량(2천동) 지원,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20개소)
 - ** 환경보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성질환 관련 의료비지원, 실내환경개선 등 수요자가 직접 다양한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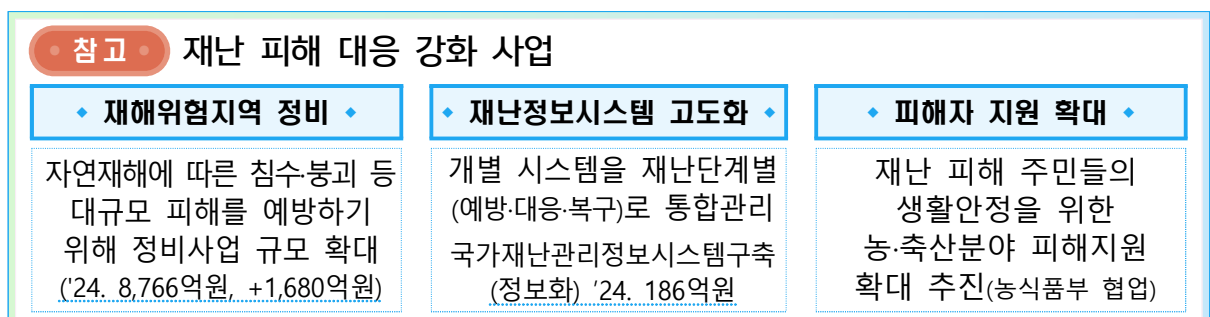
- **교통안전** 지능형교통체계(ITS) 확대(국도는 '24년까지 완료), 도로 노면 위험 요소 진단·관리기술 개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 지원
 - * 라이다(LiDAR) 자동 분석, 블랙아이스 영상 탐지 등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도로 노면 결빙 등을 방지하는 첨단소재 개발로 교통사고 예방
- **식·의약품안전**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 적용을 확대*하고, 마약류 예방교육 활성화 및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등 재할 접근성 제고
 - * (기존) 식품첨가물, 농·축수산물→ (확대) 가공·건강기능식품까지 디지털 자동심사 적용

안전 ③ 재난 예측·대응 강화

- **예측 고도화** 재난 상황관리, 의사결정 등을 지원하는 지능형 표준 시스템 구축 및 재난 분야별* 예측·분석 기능 강화
 - * (도시침수) 도시침수지도 제작,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 시설 확대('24. 135억원) (산림재난) 산사태정보시스템(17천개소, 33억원 신규), 산림계곡 유량 실시간 관측망(33억원 신규) 구축 (해안침수) 복합재해를 대비한 해안침수예상도 고도화(3→28억원)



- **대응 강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국민안전24) 등을 제공하여 재난 대응 역량 강화
 - * 과학기반 산불감시체계 구축(20개소, 32억원), 산불 공중진화를 위한 산림헬기 확충(대형1대, 중형1대, 80억원),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통한 인명피해 예방(45천개소, 110억원),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홍수 등 복합재난에 따른 도시피해 최소화 기술 개발(62억원)



- **지역단위 실천** 지역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구축하고, 환경교육도시·목재친화도시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참고 환경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주요 사업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	환경교육도시 지정	목재친화도시 조성
도시공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여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추진	지역 환경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우수 지자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 ('24. 4개 예정)	지역 목재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도시의 건축·거리·생활환경 전환 ('24. 10개소, 누적)

- **자발적 참여 유도** 탄소중립포인트제도* 편의성(통합 전용앱 구축) 및 혜택(소상공인 혜택 추가) 확대,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소비 촉진

* 에너지 사용량(전기·수도·가스 절감)·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녹색생활 실천활동(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등) 실적에 대한 포인트 지급

** 탄소감축기술을 도입·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에 인증 부여

- **친환경 경영** 전세계적인 ESG* 경영 요구에 발맞추어 국내 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계 녹색전환을 위한 자금지원 강화

*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맞춘 기업 경영 핵심 요소로, 개별 기업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자체기준에 따른 핵심 ESG를 공시

참고 친환경 경영지원 정부지원사업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정착 지원	직접지원 '24. 1,073억원 규모 - 친환경 경영 컨설팅 (34억원)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지원 (889억원) - 상생협력 프로그램(신기술 보유 기업-수요 기업 연계) (150억원)
	융자지원 '24. 1.5조원 규모 - 녹색정책금융활성화(온실가스 저감 자금 저리 융자) (1.1조원 규모) - 미래환경산업융자(녹색전환 시설비용 등 우대금리 적용) (0.4조원 규모)

- **녹색융합클러스터** 순환경제 등 신성장 산업 분야 중심 산업 생태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추진
 - ※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수립('23.6.)에 따라 자원순환, 바이오에너지 분야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추진(경북 구미, 전남 해남, 충남 보령)
- **해외진출 지원** 녹색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및 수출기반 역량 강화를 위한 펀드* 신설, 유망 녹색기업의 수출·수주 지원**
 - * 5년('24~'28)동안 총 4,000억원 규모로 조성(정부 3,000억원, 민간 1,000억원), 순환경제, 바이오발전, 신·재생에너지 등 전반적인 녹색산업의 수출 지원('24. 326억원)
 - ** 신규사업 발굴·협력 구축, 민관 원팀 수주지원단 및 현지진단팀 파견, 현지 실증 등 지원

환경 ③ 생태환경 보전

- **예측·관리** 기후·생태정보의 통합관리시스템과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반응·변동 분석시스템 구축으로 위기 대응능력 강화
 - ※ 범부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23~'26), 국가 생태계 표준관측망 신설('24~'28)
- **강·숲·바다 보호**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도시생태계·산림 복원 확대, 해안 폐기물 관리로 국토·해양 자연환경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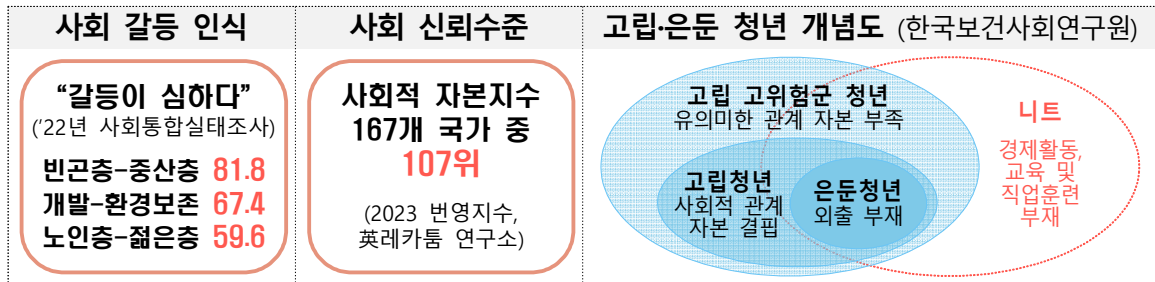
참고 자연환경 보전 주요 정책			
공공수역 녹조 대응	도시 생태계	산림 복원	해안 폐기물 관리
녹조제거선 (‘24. +16대) 등 녹조제거 설비 확충	도시생태축 연결·복원 (‘24. 147억원)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 생태축 자연환경복원 (‘24. 4.2억원, 신규)	대규모 산림복원 확대 (‘24. 84억원) 산림복원지 유지·관리 (‘24. 28억원, 신규)	해안방치 폐기물 공공수거 (‘24. 20억원, 신규) 도서지역 쓰레기관리 (‘24. 45억원, +35억원)

- **보호지역 관리** 보호지역 조사·발굴·지정, ^{가칭}자연공존지역(OECM)*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단계적 발굴('24~)로 우수 자연자원 확대
 -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Protected Areas)은 아니지만 장기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
-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통한 산림공익가치 제고방안 마련
 - ※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산림보호구역 산주의 권익 증진 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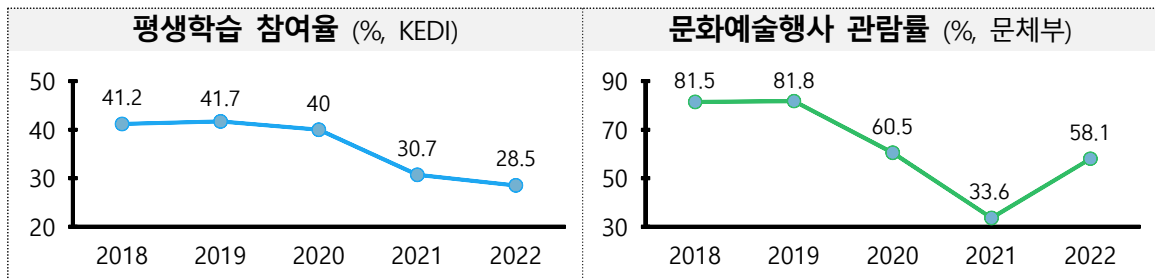
5. 연대와 성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사회

• 정책환경 분석 •

- 우리 사회의 갈등수준은 높고 신뢰수준은 낮아, 사회적 고립에 따른 新취약계층 발생이 이머징 이슈로 크게 부상



- 자기계발과 성장, 여가에 대한 관심·수요는 높아졌으나, 코로나 이후 평생학습과 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은 감소



• 현장의 목소리 •

“사회적 약자의 안전에 대한 배려와 인식 변화,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뒷받침되어야”
 - 여성청소년계 A경위, '23.8. -

“문화누리카드 만족도 조사결과 이용자의 80.1%가 정서·사회·문화적 변화를 경험했고, 이용자 대부분이 문화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행복감과 활기를 느낀다고 응답”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3.3. -

• 추진 방향 •

- **완화** 국민 모두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발굴·지원체계 강화
- **도약** 사회가치 실현과 개인 발전과 성장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풍요로운 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평생학습 활성화

- **기초생활 보호** 주거급여 예산 확대,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도입('25~) 준비 등 취약계층의 기초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참고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호 관련 주요 지원사업

생계 지원	양육·교육	주거·생활·교통
▶ 생계급여 지원수준 인상 +21.3만원 (183.4만원 4인가구 기준) ▶ 장애인연금 기초·부가급여 인상 기초(+3.6%), 부가(+1만원)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총 148억원 +3만2천 가구 ▶ 석면피해 구제급여 확대 총 +179억원 (+1,018명)	▶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단가 상향 각 +1만원, 총 49억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기준 중위소득 60% → 63% ▶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기초·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지원 +50만원(1~3구간), +30만원(4~6구간)	▶ 주거급여 예산 확대 총 +1,702억원 (2.74조원) ▶ 에너지바우처 확대 세대 평균 34.7 → 36.7만원 ▶ 친환경보일러 구입 지원 확대 총 +54억원, +1.5만명 ▶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총 +78억원 (2,324억원)

- **맞춤형 자활 지원** 취약계층·위기가구 등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 활동과 자립을 시작·지속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확대

참고 맞춤형 자활 지원 주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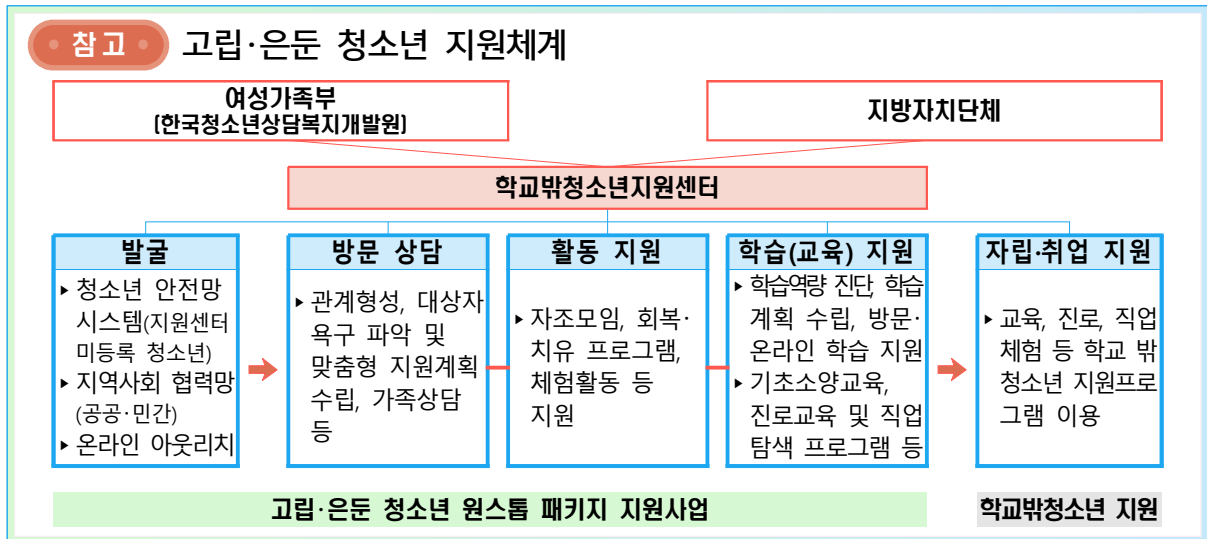
대상	'24년
장애인	▶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 인상 및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확대·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등 취업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25개소), 디지털 맞춤형 훈련센터(4개소) 등 인프라 확대
경력단절 여성	▶ 경력단절 고위기 여성 대상 수요자 맞춤형 전문서비스 지원 강화 * (여성) 심리고충·인사·노무·경력개발상담, 멘토링·동아리 등 고용유지 및 직장적응 지원
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을 동반아동까지 확대(1인당 250만원) ▶ 5대폭력피해자 통합지원단(+3개시도)·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11개시도) 확대
위기청소년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은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추가)
자립준비청년	▶ 자립수당 인상(+월10만원) ▶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50명), 맞춤형 사례관리 확대(2,000→2,750명)
가족돌봄청년	▶ 가족돌봄청년(4개 시도, 2400명) 시범사업 도입
경계선지능인	▶ 「가칭경계선 지능인 지원방안」 수립 추진

- **범부처 협력** 新취약계층 지원과 복지서비스 신청주의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범사회부처 협의회” 정례 운영 및 제도 개선 지속

※ 교육부 차관 주재, 반기별 1회 개최 (사전 실무논의는 교육부 차관보 주재로 수시 개최)

완화 ② 사회적 고립 방지

- **고립·은둔 청소년** 조기발굴, 방문상담, 맞춤형 서비스, 자립지원 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24. 10.89억원,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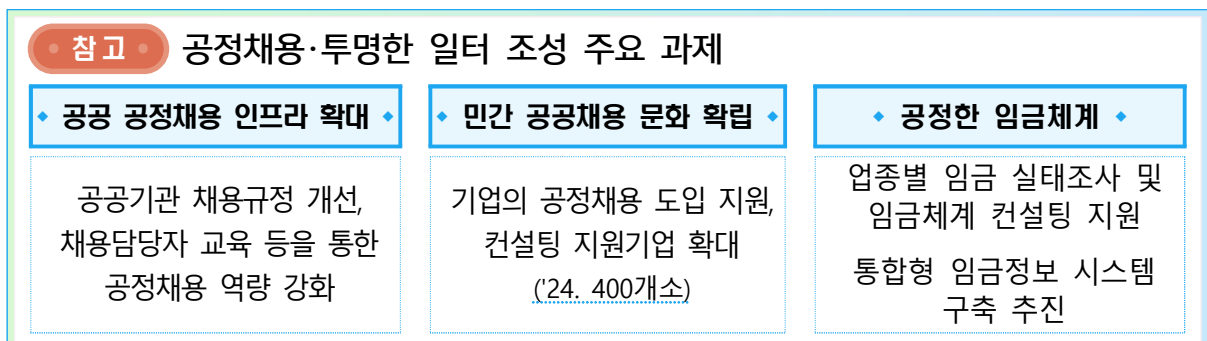
- **고독사 방지·일상복귀 지원** 생애주기별 고독사 위험군 지원 확대* 및 정서적 취약계층의 사회 관계망 형성·일상 복귀 지원**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23. 9개 시도 → '24.7월 17개 시도)

** 고립·은둔을 택할 위험이 있는 정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인문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회통합 추진(5개 → 9개, 19억원)

도약 ③ 신뢰와 존중으로 연대 기반 마련

- **투명한 일터** 공공·민간부문 공정채용 인프라 확대 및 문화 확립, 기업의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정보제공



- **상호 이해 증진** 세대갈등·이주민 등 다양한 사회이슈에 대한 국민 의견 청취·소통을 통해 공감대 형성 및 정책제안 도출
 - ※ (국민통합위원회) 탈북민, 외국인근로자 등 특별위원회 세미나·정책제안 활동 지원 (여가부)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양성평등 이슈(맞벌이 돌봄 문화 확산, 조직문화, 세대 간 문화 이해 등)를 주제로 중장년·청년 간 소통·공감의 기회 마련('24. 총 6개 지역)
- **사회참여 촉진** 디지털·글로벌 환경변화를 반영한 학교 시민교육 추진*, 은퇴 경력자 등의 사회기여활동 활성화 추진
 - * 학교 시민교육 프로그램·교재 개발 연구 및 현장 시범 적용('24. 3.4억원)
- **보훈문화 확산** “히어로즈 패밀리” 추진, 보훈콘텐츠 제작, 제복근무자 통합의료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으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존경·존중 확산

참고 보훈문화 확산 주요 추진사항		
히어로즈 패밀리	IT기술기반 보훈콘텐츠 제작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국가·국민 안전을 위해 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의 어린 자녀가 “히어로즈 패밀리”로서 자긍심을 갖고 성장하도록 민관이 협력	보훈인물을 디지털 휴먼으로 구현하여 민·관 기념행사 등에 가상 인플루언서로 활용, 독립기념관 내 국가발전사 디지털 전시관 조성 추진 등	경찰·소방관, 군인 등 제복근무자(Men In Uniform)의 의료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 체결 등 협의체 구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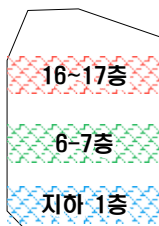
도약 4 풍요로운 문화를 누리는 사회 조성

- **고른 문화향유 기회** 모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금 지급 규모 확대* 및 이용자 맞춤형 인프라 확충**
 -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연 11만원 → 13만원, 총 2,397억원)
 - ** 유아(6억원)·고령자(56억원)·장애인(반다비 국민체육센터, 429.7억원) 맞춤형 체육시설 확충, 열린 관광지 30개소 추가 조성,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신규 권역 선정 등
- **문화예술 창·제작 유통지원** 다양한 양질의 문예프로그램이 전국으로 유통되고 수요 공급이 상시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 정보 제공
 - ※ 다수 기관에서 집행하던 문화예술계 지역 관련 사업을 통합·확대 ('24. 490억원, +116억원)

- **청년 예술인 지원** 웹툰·게임·영화 등 콘텐츠산업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아트코리아랩**” 운영을 통한 사업화·네트워킹 지원

* OTT 글로벌 전문인재, 콘텐츠 번역인재, 문화기술융합인재 등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인재 집중 양성 추진('24. 619억원, +10억원 확대)

** 예술계 대상 공간·장비 대여 지원('24.3월~), 해외 유사기관과의 업무협약 등 교류 확대

참고 아트코리아랩 운영 공간 구성			
	구 분	주요 기능	주요 공간구성
	창업·성장	기업 입주	▶ 예술기업의 입주공간,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
		비즈니스 지원	▶ 비즈센터 (컨설팅 분야 : 법률·세무·마케팅·기술 등)
	교류·연구 (네트워킹)	교육·훈련	▶ 강의실, 미디어교육실, 워크숍룸, 아카이브룸 등
		네트워킹	▶ 네트워킹 라운지, 쇼룸, 가변형 행사공간 등
	창작·제작	창·제작 스튜디오	▶ 이머시브사운드 스튜디오, 키네틱룸, 영상·편집실 등
		시연·유통	▶ 블랙박스형 시연 공간 (시제품 검증, IR 등)

도약

5 또 다른 삶의 시작을 위한 평생학습 활성화

- **평생학습 접근성 강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확대*('24. 8만명, +2만명), 대학 내 평생교육체제 및 장애인 평생학습도시('24. +12개) 지속 확대

*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 선정, 바우처 신청 시 서류제출 간소화

- **문해교육 지원 확대** 문해교육의 영역과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생활 밀착형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 디지털 문해교육 포함, 생활과학, 경제활동·직무 관련 능력 등 영역 확대 지속 및 청년·이주배경 가족 등 새로운 문해교육 수요계층 발굴

**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신규 도입(3개 시도 내외 지원) 및 성인의 디지털 문해능력을 측정하는 제1차 디지털 성인문해능력조사 실시

V. 과제별 소관 부처

핵심과제	담당부처
------	------

사회난제 해결

1. 인구절벽 완화 및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회복 (1) 출산·양육에 힘이 되는 의료·돌봄서비스 강화

• 의료비 보조를 통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복지부
• 보조금 확대, 유보통합 추진 등 양육 여건 개선	복지부, 교육부
• 늘봄학교 본격 도입 등 돌봄서비스 확대	교육부, 여가부

회복 (2) 가정친화적인 사회규범 확립과 사회 경쟁 완화

•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	고용부
• 다양한 형태의 가족 맞춤형 지원 강화	여가부
• 지원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를 통한 다자녀 가구 우대	관계부처
• 교육분야 경쟁 완화	교육부

회복 (3) 청년층 주거·일자리 등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

• 일경험 기회 확대, 구직의욕 강화 등 청년취업 지원	고용부
• 주택 공급 및 자금 대출 등 주거 지원	국토부

적응 (4) 인재 경쟁력 제고

• 첨단분야 인재양성 추진	교육부
• 산업변화와 구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고용부, 여가부
• 공교육 다양성 확대,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교육부

핵심과제	담당부처
적응 [5] 고령층 삶의 질 개선	
•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 고령층 계속고용 활성화	고용부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등 고령층 건강 증진 지원	복지부, 산림청, 보훈부
적응 [6] 해외인재 유치	
• 유학생 유치 전략 수립 및 이공계 장학생 선발 확대	교육부, 법무부
• 이주배경 가족의 학습권 보장 등으로 국내 적응지원	교육부, 여가부, 법무부

2. 지역 성장동력 창출 및 균형발전

개선 [1] 지역 일자리 환경 개선	
• 투자유치 환경개선 등 신산업 기업 유치·육성	산업부, 교육부 등
• 지역맞춤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등 지역 노동수급 개선	고용부
• 산업·일자리·생활서비스 기반 확충으로 농촌 재생 지원	농식품부
개선 [2] 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	
• 유희시설을 활용한 편의시설, 문화시설, 도시숲 조성	교육부, 문체부, 산림청
• 지역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 문화활력 제고	문체부
• 필수의료 지원체계 구축 등 의료 인프라 확충	복지부
개선 [3] 취약지역 지원 강화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신규 도입 등 지역소멸대응	행안부
• 거점기관 지정을 통한 사회서비스 격차 완화	복지부
• 생활인구 산정 범위 확대로 데이터 분석 지원	통계청, 행안부

핵심과제	담당부처
특화 (4) 지역인재 양성 · 인구정주를 위한 발전모델 창출	
• 발전특구·거점 지정으로 인재양성·정주환경 개선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 도심융합·문화특구 지정으로 살기 좋은 지역인프라 조성	국토부, 문체부
• 연구개발 특구 중심 연구협력체계 구축 등 추진	과기정통부
특화 (5) 지역 특성 기반 매력 발굴	
• 생활인구 유입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행안부
• 소비·교육·여가 기반 마련 등 살기 좋은 생활권 조성	행안부
• 독창적 지역 관광자원 발굴·육성	문체부, 농식품부, 산림청
• 농업분야 진입·정착 지원 등 농촌 유입 활성화	농식품부

3. 디지털 적응력 강화 및 보편적 접근성 보장

촉진 (1) 디지털 교육 혁신	
• AI 디지털교과서 등 디지털 기반 교실 혁신 지원	교육부
• 정보교과시수 확대, 디지털새싹 운영 등 디지털 인재양성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교위
• 디지털 기반 평생교육 및 디지털역량 강화 훈련 확대	교육부, 고용부
촉진 (2) 사회서비스 제공 편의성 확대	
•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 구축 등 공공서비스 접근성 강화	행안부
• 선제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추천해주는 혜택 알리미 구현	행안부
• 초거대AI를 접목한 각종 서비스 효율성 향상	과기정통부
촉진 (3) 신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 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R&D 발굴	과기정통부
• 국가 R&D 인프라로서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	복지부
• 사회난제 및 미래산업에 대응하는 도전적 연구개발 지원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핵심과제	담당부처
보완 (4)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및 이용자 권익 보호	
•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 수립 추진	과기정통부
• 대국민 맞춤형 교육 실시 등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방통위
보완 (5) 디지털 범죄 대응	
• 불법·유해정보 차단으로 범죄 확산 조기 방지	방통위
• 미래 보안인재 양성 및 첨단 수사 시스템 구축	과기정통부, 경찰청
• 아동·청소년 온라인 피해 상담·신고 지원 등	여가부
보완 (6) 디지털·미디어 격차 해소	
•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교육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
• 디지털 취약계층 접근성 제고를 위한 포용적 기술 적용	복지부, 과기정통부
•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스마트화	과기정통부

더 좋은사회로 도약

4.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증진과 환경 보전

안전 (1) 신체·정신건강 증진	
• 고위험 청소년 특화 맞춤형 지원 등 정신건강 증진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 필수의료체계 개선 및 필수약품 국내자급화 지원	복지부, 식약처
• 스포츠클럽 등록 편의성 제공 등 체육활동 활성화	문체부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등 취약계층 영양 지원	식약처

핵심과제	담당부처
안전 [2]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보장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고용부
• 실내환경 유해요소 저감 지원	환경부
• ITS 구축, 도로 노면 관리기술 개발 등 교통안전 증진	국토부
• 수입식품 전자심사 적용 확대 등 식·의약품안전 제고	식약처
안전 [3] 재난 예측·대응 강화	
• 지능형 표준시스템 구축 및 분야별 예측 고도화	행안부, 환경부, 산림청, 해수부
•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행안부, 환경부, 산림청, 과기정통부
환경 [4] 탄소중립 생활 실천	
• 탄소중립도시, 환경교육도시 등 지역단위 실천	환경부, 산림청
• 일상생활 자발적 참여 유도	환경부, 농식품부
환경 [5]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	
• 산업계 녹색전환을 위한 친환경 경영 지원 강화	환경부
• 자원순환, 바이오에너지 분야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환경부
• 펀드신설 등을 통해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	환경부
환경 [6] 생태환경 보전	
• 통합관리·분석시스템 구축으로 예측·관리 능력 강화	환경부
• 녹조대응, 폐기물 관리 등 국토·해양 자연환경 보전	환경부, 산림청, 해수부
• 보호지역 조사·발굴·지정, OECM 인식제고 등	환경부, 산림청

핵심과제	담당부처
------	------

5. 연대와 성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사회

완화 (1)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국토부, 산업부, 농식품부, 환경부
• 취약계층·위기가구 등 대상별 맞춤형 자활 지원 확대	고용부,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 취약계층 지원 범사회부처 협의회 정례 운영 등	관계부처

완화 (2) 사회적 고립 방지

•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여가부
• 사회관계망 형성 등을 통한 고독사 방지·일상복귀 지원	복지부, 문체부

도약 (3) 신뢰와 존중으로 연대 기반 마련

• 공정채용 인프라 확대 및 문화확립 등	고용부, 권익위
• 사회갈등 요소에 대한 국민 소통 증진	여가부, 국민통합위
• 시민사회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 확대 등 사회참여 촉진	교육부
• 이용자 친화적 콘텐츠 제작 등 보훈문화 확산 노력	보훈부

도약 (4) 풍요로운 문화를 누리는 사회 조성

• 문화향유 기회보장을 위한 지원금 및 인프라 확대	문체부
• 문화예술 창·제작 유통지원을 위한 통합정보 제공	문체부
• 콘텐츠산업 핵심인재 양성 등 청년 예술인 지원	문체부

도약 (5) 또 다른 삶의 시작을 위한 평생학습 활성화

• 바우처 지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 등 접근성 강화	교육부
• 생활밀착형 문해교육 지원 확대	교육부